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진흥지구의 서울시 도입방안

2013. 1. 21 제133호

윤형호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상권활성화 제도의 현황과 실태
- II. 미국의 사업진흥지구
- III. 사업진흥지구의 서울시 도입방안

요 약

그동안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면서 제도적으로 자체예산 조달능력을 갖춘 사업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서울시도 새로운 민간주도형 상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사업진흥지구의 도입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권활성화 사업은 정부주도형이고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자립가능성 부족

중소기업청은 2002년 이후 약 1조 5,711억원을 상권활성화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실태를 보면 정부주도형 사업으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에서는 사단법인 상권활성화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을 만들어 3년간 정부예산 100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권활성화기구는 지역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이전보다 진보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 상인, 회사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재생 사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된 상권활성화 사업사례도 여전히 정부 의존적이며 민간의 예산분담과 책임성이 부족하여 예산지원이 만료되는 3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간주도형이면서 자체 예산조달의 기능을 갖춘 사업진흥지구

사업진흥지구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사업구역을 정하고 건물주들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여 그 재원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는 제도이다. 즉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수혜를 얻는 건물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며, 예산을 부담한 사업진흥지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담자의 자치가 인정된다. 뉴욕시에서는 1984년 처음으로 유니온 스퀘어 사업진흥지구가 설립된 후 현재 약 60여개의 사업진흥지구가 운영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5년에 영국과 독일에서도 도입되었다.

서울시의 사업진흥지구 도입방안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진흥지구의 도입이 적절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업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구성원 사이에 사업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진흥지구는 재정능력이 되어 민간매칭펀드가 가능한 지역부터, 동일한 업종과 테마로 인지도가 높은 상업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토결과, 압구정로데오 지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진흥지구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상인들의 설문에 의하면 민간주도형 사업진흥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자원분담 의사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I. 상권활성화 제도의 현황과 실태

정부주도형이고 자립성을 결여한 상권활성화 사업

- 현행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투자는 많으나 성과는 부진
 - 오랜 기간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성과는 부진
 -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청은 1조 5,711억원 투입
 - 2006년과 2011년 사이 전국의 전통시장 개수는 1,610개에서 1,517개로, 매출은 동 기간 동안 29.8조원에서 24.0조원으로 감소
 -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
 - 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시행주체가 되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
 -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청이 정한 정형화된 사업만을 추진할 뿐 지역과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은 부족
 - 사업운영체계는 수직적이고 사업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시행
 - 현행 사업운영체계 하에서 사업주체인 상인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뿐 예산분담과 책임성 부재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 관련시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정형화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주로 단기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 마포 상권활성화 기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

- 도화동, 용강동에 2011년부터 3년간 상권활성화 기구를 시범적으로 운영
 -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은 마포구 도화동, 용강동 가로를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공유한 약 30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상권활성화 지구를 지정
 -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달리 사단법인 마포상권활성화 기구를 결성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을 강화
 - 지구안의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 사무실 직원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문화프로그램, 축제 등을 개최



[그림 1] 용강/도화동 상점가 지리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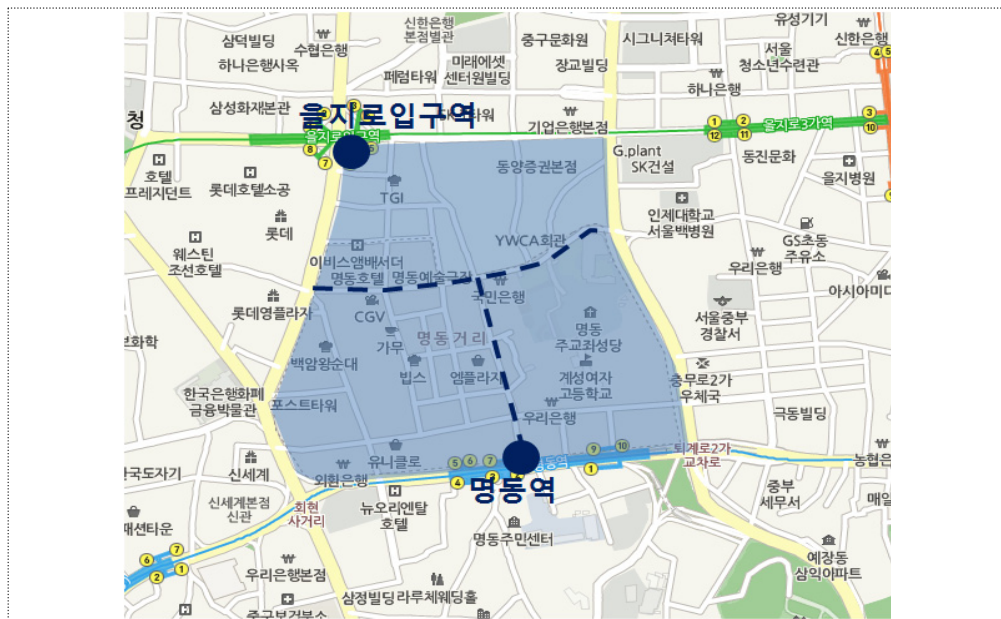
- 타운매니저의 배치로 종합적인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
 - 타운매니저는 3년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린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마케팅, 지역문화 등 부문별로 전문인력을 배치

- 도시계획, 중소기업경영학 전공자이며 지역상권 활성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타운매니저로 고용
-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역단위의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
 - 시설현대화에 집중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는 달리 거리조명, 가로환경 개선, 거리디자인, 보행로 개선, 교통계획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지역단위계획을 구상하여 집행
 - 공동 판매시설, 축제 개최, 특산품 개발, 상인대학 등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
- 그러나 상권활성화 기구는 정부예산에 의존적이며 자립가능성 불투명
 - 연간 사업예산이 30억원이지만 민간 자체조달예산은 4천만원 정도로 상인, 건물주에 의한 자체예산 확보능력은 매우 미흡
 - 3년 사업 후 정부지원예산이 종료되면 상권활성화 기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

명동은 최대상권이지만 관광특구협회의 역량 및 자립기반은 결여

- ☐ 국내 최대 상권이지만 자립능력이 부족하고 무상참여를 선호
 - 명동특구관광협회는 전국 최대상권을 대표하는 오래된 조직
 - 명동특구관광협회는 1982년 설립되었고 지리적 범위는 명동 1·2가, 충무로1·2가, 을지로 2가, 저동 및 남대문로 2가 구역
 - 일일 유동인구가 120만명에 달하는 전국최대 상권
 - 수혜자인 건물주 대부분이 비용분담을 회피

- 협의회 대상회원은 약 500여명의 건물주이지만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이 10% 미만이고 대부분 건물주는 무상으로 참여
- 약 30~50여명의 회원이 월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월 수입은 약 천만원이고 연간 1억원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조달
- 로얄호텔같은 오래된 지역법인,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명동교자만두, 함흥냉면 등의 노포(老鋪)만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낼뿐 임대료를 많이 받는 플래그쉽(Flagship) 점포의 건물주는 기피하는 경향
- 서울시와 자치구가 명동 환경정비 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수혜자인 건물주의 대부분은 비용분담 기피



[그림 2]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구역

□ 전국 최대상권의 민간기구로서 역할 재정립이 필요

- 현행 역할로서는 상권활성화에 역부족
- 예산부족으로 마케팅, 홍보, 회원서비스 등 핵심분야 전문직원을 채용하

지 못하고 직원 2명이 이사회 진행, 회비 수납, 명동축제 개최 등 최소한의 업무만을 진행

-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고 명동안내 책자도 타 민간업체가 다국어로 발행
- 중구청은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명동축제 예산을 거의 부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광안내원 배치
- 건물주의 예산분담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식 사업진흥지구의 도입을 검토

II. 미국의 사업진흥지구

뉴욕시의 사업진흥지구는 상권활성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

- 사업진흥지구는 미국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 1980년대 중반 상공회의소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선하여 도입한 제도
 - 상공회의소의 상권활성화 사업은 자발적인 회비로 예산을 조달하기 때문에 무상참여 문제와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어려움에 봉착
 - 미국에서 사업진흥지구의 성공으로 각국에서 도입하는 추세
 - 사업진흥지구는 1980년 초반 뉴욕시에서 입법화되어 도입되었고 그 후 약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
 - 사업진흥지구는 민간조직이 스스로 지구내의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제도로 평가
 - 영국과 독일은 상공회의소의 TCM(Town Center Management)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에 미국식 사업진흥지구를 각각 도입

뉴욕시의 사업진흥지구는 민간주도형으로 활발하게 시행

- 뉴욕시는 사업진흥지구 사업을 선도적으로 도입
 - 1981년에 뉴욕주는 미국 최초로 사업진흥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
 - 뉴욕주는 사업진흥지구의 기본적인 활동내용, 설립 및 운영방법, 민간 부담금의 조건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부에게 사업진흥지

구의 설립허가 및 감시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

· 뉴욕시는 사업진흥지구제의 추진을 위해 곧 바로 조례를 제정

사업진흥지구(BID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란?

- 사업진흥지구는 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민간조직
 - 민간조직이 일정한 경계를 가진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과 다양한 사업을 하는 제도
 - 민간조직은 방문객 및 거주민을 위해 안전, 공공시설 유지보수, 도로확보 및 정비 등 공공서비스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활동 실시

사업진흥지구의 특성

- 재원의 자체조달과 강제징수
 - 사업진흥지구의 건물주는 재산세의 2~5%의 해당하는 분담금(assessment)을 추가적으로 납부
 - 분담금은 조세의 성격이며 지방정부는 분담금을 강제징수하고 사업진흥지구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이관
 - 사업진흥지구 설립은 추가적인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
- 수익자 부담원칙과 부담자 자치원칙
 - 사업진흥지구의 특징은 상권활성화 사업의 결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건물주가 재원을 부담
 - 수익자 부담은 기존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던 무상참여를 방지하고 자원조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 지방정부는 투표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진흥지구를 인가하고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이지만 자치권한을 부여

- 상권활성화 사업의 주된 정책도구로서 사업진흥지구제를 적용
 - 뉴욕시에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사업진흥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
 - 1984년에 유니온 스퀘어 공원 부근의 건물주들이 첫 번째 사업진흥지구를 설립
 - 2010년 현재 64개의 사업진흥지구가 운영되고 3,100개의 블록을 관리
 - 뉴욕시 중소기업국은 사업진흥지구의 역할증진을 도우고 있으며 타 뉴욕시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 안정적인 수입과 확대된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

- 분담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체수입의 확보가 가능
 - 2009년 사업진흥지구 전체 총수입을 보면 총예산은 99.9백만불이고 이 가운데 78.8%인 78.5백만불은 분담금으로부터 들어와 안정적인 자체수입을 확보
 - 그 외 기부금 6.28%, 특별 행사모금 6.48%, 사업수입 3.2%, 외부용역수입 3.48%로 구성
- 사업진흥지구의 예산을 사업예산 위주로 지출
 - 2009년 사업진흥지구의 총지출을 사업비별로 보면 일반관리비는 15.78%로 적은 부분을 차지
 - 청소(22.79%), 안전(21.27%), 일반관리비(15.78%), 자본지출(9.41%), 가로관리 및 보수(5.4%), 조경 및 식재(3.54%), 연말조명(1.21%)과 같이 직접적 효용을 낳는 공공시설관리와 공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대부분

□ 사업진흥지구 사업은 지역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

- 다양한 규모의 사업진흥지구
 - 2009년 뉴욕시의 58개 사업진흥지구의 예산을 보면 53,000불에서 17백만불까지 다양한 규모
 - 연 예산이 백만불이 넘는 대형 사업진흥지구가 6개, 20만불보다 적은 소형 사업진흥지구가 21개로 각 지구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
- 지역별로 적절한 공공시설관리와 공공서비스 세부사업을 추진
 - 유지관리 : 도로와 보도 청소, 낙서지우기
 - 안전 및 안내 : 공공경비원, 안내원
 - 상업활성화 : 공실률 완화, 업종선정
 - 마케팅 : 이벤트, 대민홍보, 관광안내 홍보물, 연말연시 장식
 - 자본투자 : 가로등 조경, 디자인 쓰레기통, 거리안내판, 우체통, 이동화단
 - 조경 : 수목 및 화초 식재, 수목관리
 - 지역서비스 : 자선활동, 기부금 모집, 노숙인 및 청소년 지원

다운타운 얼라이언스(Downtown Alliance) 사업진흥지구는 도심재생에 크게 기여

□ 침체된 상업여건과 낙후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 도시의 침체를 탈피하고 주거·상업복합지역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 1995년 설립 당시 로어 맨하탄은 상점가의 공실률이 20%가 넘고, 주거인구도 고작 15,000명에 불과

- 회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거리는 더러웠으며, 밤에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
- 도심재생을 위해 사업체, 정부, 지역단체 파트너십인 '다운타운 얼라이언스' 사업진흥지구를 설립
-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업진흥지구로 성공
 - 다운타운 얼라이언스는 월스트리트, 무역센터가 위치하고 오피스, 상업, 주거, 관광지가 혼합된 지역으로 미국 내 4번째로 큰 사업진흥지구로 변신
 - 사업진흥지구 사업은 성공하여 2013년 주거인구가 약 6만명으로 증가



[그림 3] 다운타운 얼라이언스의 경계

- 책임성, 전문성, 자립성이 확보되는 사업진흥지구의 운영체계를 구축
 - 대형건물주와 다양한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

- 다운타운 얼라이언스는 이사진이 39명이고 이사는 대부분 대기업, 금융 기관, 대형 부동산회사이며 상점주 대표는 단 한명
- 그 외 이사로 뉴욕시장, 뉴욕시 재무담당 부시장, 맨하탄 구청장(Borough President)과 공익대표로 페이스대학, 맨하탄 커뮤니티 컬리지, 트리니티 교회, 맨하탄 커뮤니티 위원회가 참여
-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적 인력으로 운영
 - 연간 예산 약 11백만불은 분담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
 - 직원으로 마케팅 매니저, 지역경제 전문가 등의 사무직원 52명을 비롯하여 치안요원 59명, 청소원 53명, 셔틀버스 운전사 12명이 근무

□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개선

- 방문객과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무료 셔틀버스 : 로어 맨하탄 주위를 따라 37개의 정거장을 순환하며 연간 약 80만명의 승객이 이용
 - 치안 서비스 : 경비원들이 거리 순찰 및 방문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
 - 청소 : 청소 및 낙서제거, 하루 약 1,500톤의 쓰레기를 회수
 - 사회적 서비스 : 노숙자에게 쉼터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무료와이파이 : 공공장소 14곳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에 의한 공원관리와 거리미화
 - 공원관리 : Bowling Green Park를 포함한 4개의 공원을 관리. Coenties Slip Park 경우, 뉴욕시가 자투리 공간을 새로운 공원으로 개발한 후 민

간이 공원을 관리하고, 야외카페 운영

- 거리 디자인 : 디자인 휴지통, 사용자 친화적인 이정표, 멋스러운 조명 등의 거리가구를 설치
-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부흥사업과 연구조사 사업을 실시
 - Hive at 55: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업 및 공동작업 공간을 제공
 - 로어 맨하탄의 지역경제와 사업체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 지역상인과 사업체를 지원하는 마케팅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
 - 주요 거점에 인포메이션 키오스크를 마련하여 관광안내
 - 관광 팸플렛, 상점 및 레스토랑 주소록, 뉴스레터, 셔틀버스 지도, 이벤트 일정표, 연간 보고서 등을 발간



로어 맨하탄의 셔틀버스



거리순찰 및 안내



다운타운 얼라이언스의 노숙자 서비스



다운타운 얼라이언스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그림 4] 다운타운 얼라이언스의 주요사업

Ⅲ. 사업진흥지구의 서울시 도입방안

서울에서도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 정부주도형 사업에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전환
 - 지역상인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방세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으로 법제도 기반을 마련
- ☐ 지역상권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건물주와 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
 - 지역상권 부흥과 자원분담에 관한 공감대는 매우 중요
 - 지역특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
- ☐ 여건이 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명동, 삼청동길, 가로수길과 같이 인지도가 높고 업종과 지역문화가 유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상권이 발달하여 민간자금 매칭이 가능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 ☐ 주요 추진과제

| 주요과제 | 추진전략 |
|-----------------------------------|---|
| 정부주도형 사업에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전환 | - 상인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방세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으로 법제도 기반 마련 |
| 지역상권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건물주와 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 | - 지역상권 부흥과 자원분담에 관한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 - 지역특성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제고 |
| 여건이 허용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시행 | - 동일업종으로 구성되고 인지도가 높은 지역부터 시행 - 민간자금 매칭이 가능한 지역부터 시행 |

압구정로데오 상권을 우선 적용대상지로 적극 검토

□ 압구정로데오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

- 의류와 음식점이 밀집된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지역
 - 2010년 기준으로 패션, 미용, 한식업, 의원 등이 많고, 구역 내 사업체는 약 1,535개이며, 종사자 수는 13,435명
- 압구정로데오 상권은 압구정로, 선릉로, 도산로, 언주로에 둘러 쌓여있고 해당 면적은 354,445㎡



[그림 5] 압구정로데오의 외곽경계 간선도로

□ 압구정로데오는 최근에 침체되어 상권활성화의 공감대가 형성

-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압구정로데오는 침체
 - 2008년을 기점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의 임대료가 압구정로데오를 추월

- 상권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사단법인 압구정로데오 조직
 - 2011년 300여명의 건물주와 상점주들이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압구정로데오를 조직하고 운영자금을 출연
 - 2012년 10월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개통했고 배후에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상권 잠재력은 여전히 큰 편

□ 상인들은 지구내의 공공서비스와 가로환경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표명

- 현행 구청의 공공시설 및 녹지 관리, 청소, 불법주차관리에 대해 부정적
 - 상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녹지가 많지 않아 거리가 아름답지 않음' 37%, '녹지가 부족하고 관리가 불량하여 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음' 36%라고 응답
 - 주차시설에 대해 '무질서' 36%, '불법주차가 많고 매우 무질서함' 36%로 응답

□ 민간 주도형 사업진흥지구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

- 구청의 공공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정기적인 청소(71%), 공공설치물(벤치, 안내판, 휴지통) 설치 및 관리(74%), 조경관리(6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순찰 및 관광안내를 하는 경비원(52.5%), 외국어홈페이지(73%), 대형매장 및 문화공연시설(78%), 축제 및 구역 할인쿠폰(72%), 상점소개 및 예약시스템을 갖춘 공동 홈페이지 관리(7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압구정로데오는 사업진흥지구의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재산가치가 많은 소수의 건물주 때문에 사업진흥지구의 추진은 용이
 - 과세대상 1,306 필지가운데 47개의 과세대상 필지가 전체 토지재산세의 50%를 차지하여 이들이 찬성한다면 사업실시 용이
- 사업진흥지구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자원분담도 긍정적으로 인식
 - 상점주 약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1.3%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분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
 -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회비납부에 대해 50.6%가 찬성
 - 납부금액에 대해 1만원(32.6%), 2만원(25.8%), 3만원(16.9%), 5만원(14.6%) 순으로 응답
- 압구정로데오 사업진흥지구를 민간주도로 추진
 - 압구정로데오는 법제도가 준비되면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을 조달할 수 있고 청소, 공공시설관리, 홍보, 마케팅을 시행하기 위해 적정 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
 - 특별히 사업진흥지구가 구체적으로 상권활성화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이 가능

윤형호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31

younh@si.re.kr